

↑ 코스피	2706.96 (+1.80)	↓ 코스닥	858.10 (-1.23)
↑ 금리 (미국 9년)	3.466 (+0.075)	↑ 환율 (원-달러)	1364.10 (+9.20)

김승현 회장  
5년만에 현장경영  
3형제 승계 드라이브  
02



## 민주 175석, 국민의힘 108석...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야권 189석 민주, 서울 37석 '덧밭' 호남 석권 국민의힘, 서울 19석 PK지역 압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누르고 과반이 넘는 압승을 거뒀다. 지역구 254곳 중 161곳을 차지했고, 비례의석도 14석을 가져갔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9석이다. 국민의힘은 비례를 합쳐 108석을 가져가, 참패는 했으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표 상황에 따르면 오전 11시(개표율 100%) 기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민주당, 90곳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 1곳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6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가져간 셈이다. 여기에 '덧밭'인 호남은 28석(광주 8·전남 10·전북 10)을 모두 석권했고, 제주도 3석을 모두 가져왔다. 과반의 승패를 가른 곳은 중원이었다. 충청권 28석 중 21석(대전 7·세종 1·충남 8·충북 5)을 확보했다. 특히 충북 청주상당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넘어갔지만, 이번에 다시 확보하면서 충북 8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인 5개를 얻었다.

'디비졌다'고 평가를 받았던 부산경남(PK)에서는 부산 북갑, 경남 김해갑·을, 경남 창원성산만 당선되면서 지난 총선에 비해 2석이 줄어들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을 이번에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6석)에서는 동구에서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는 11석, 경기 6석, 인천 2석을 차지해 19석에 그쳤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서울에서 도봉갑, 마포갑, 동작을 등 3석을 더 확보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덧밭' PK 지역의 표심이 결집한 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산 18석 중 17석을 차지하면서 21대 총선보다 2석을 더 확보했다. 경남에서는 양산을 차지하고 창원성산을 빼앗기면서 16석 중 13석을 얻었다.

또 다른 덧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은 대구 12석, 경북 13석을 모두 가져왔다. 강원도에서도 8석 중 6석을 가져오며 현상유지를 했다.

이날 11시 기준 비례대표 정당투표 개표율은 100%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이 26.69%, 조국혁신당이 24.25%, 개혁신당이 3.61%를 얻었다.

이에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연합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길어지는 의료공백... 지쳐가는 환자들

11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신발을 벗은 한 환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50일이 넘어가면서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은 물론 환자들도 모두 지쳐가고 있다. /뉴스1

2석을 확정지었다. 이밖에 자유통합당 2.26%,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봉쇄조항(3%)에 걸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한편 지역구 주요 격전지를 살펴보면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48.3%로 이지는 민주당 후보(47.7%)를 599표차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마찬가지로 한강벨트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54.01%)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45.98%)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m-커버스토리

## 의대증원, 대화-강행 갈림길 속도감 있는 '돌봄정책' 기대

### '여소야대' 교육계 분위기

민주당, 정원 조정 압박 예고 안철수 당선인도 '유예' 주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한 교육·의료 개혁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하며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을 두고, '정원 조정'을 제안하는 야당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야심 차게 내놔던 정책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줄곧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 증원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2000명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2000명 조정과 의료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도 11일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정책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기존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거나 조정한다면 결국 '총선용'이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법률 개정 등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는 않아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 금투세 폐지 제동, 밸류업 프로그램 안갯속

거대야당 따른 자본시장 정책 변화 정부·여당 추진 정책 동력약화 예상 野, 금투세 폐지만 동의 가능성 낮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 추진 등은 향후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금투세 도입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한 이번 총선 결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주장해 온 각종 정책에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본시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고, 여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만큼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공약의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원안대로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야당이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만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

이다.

또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미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추진력 약화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2일 금융위원회의 인센티브 발표에도 의회 지지가 없이는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기업 밸류업의 목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할 것 이란 전망도 나온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윤, 여 참패 후 첫 화두는 '국정쇄신'... 심판 민심 조기 수습 나서  
▲야당, 한덕수·대통령실 참모진 사의에 "또 국면전환용" (사진 뉴스1)

▲'민심 바로미터' 충북, 이번에도 '족집게 명성' 재확인  
▲김태호, 여 총선 참패에 "변하지 않으면 미래 없어"



▲조국 "검찰, 김 여사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거부하면 특검법 추진" (사진 뉴스1)  
▲시민들 "여소야대는 정권 '불통' 심판 의미... 협치해야"